Chapter 4

경제협력 역량 강화

제1절 다자 및 지역 경제외교 94

제2절 에너지 · 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 환경 외교 105

제3절 양자 경제외교 113

제 1 절

다자 및 지역 경제외교

1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항저우 정상회의까지 총 11번의 회의를 거쳐 주요 국제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G20 정상들은 제11차 항저우 G20 정상회의(2016.9.4~5)에서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이라는 주제로 거시경제 공조, 무역 · 투자 등 전통적 이슈뿐 아니라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개발, 기후변화, 난민 등 분야별 G20의 정책 공조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로 「정상선언문」과 37개의 핵심부속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G20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저성장 타개를 위해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 의제를 신규 도입하여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혁신 액션플랜」 등을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로 도출하여 혁신 의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반세계화, 신고립주의 등 보호주의 확산의 한 요인이 양극화임에 공감하고, 자유무역의 혜택이 널리 분배되도록 하는 국내정책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철강 과잉생산 문제 협의를 위하여 OECD와의 협력하에 글로벌포럼 구성에도 합의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자본흐름 대응,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IMF 개혁, IMF 특별인출권(SDR) 역할 강화 등과 관련한 13개 과제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래 G20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개발 분야에서 G20 정상들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G20 차원의 공동계획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상들은 테러, 난민, 기후변화, 항생제 내성 등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도출하고, 브렉시트 여파의 최소화를 위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신규 도입된 혁신 의제와 관련해 혁신 TF 공동의장국(한, 중, 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의 창조경제 정책을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하고 무역 의제와 관련 자유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요청하였다.

2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참석

제24차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16년 11월 19~20일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우리 국무총리를 포함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 – 아 · 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Found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Pacific)'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 '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 통합' 등 세부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별도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는 APEC 정상들과 역내 기업인들이 경제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을 초청하여 별도의 비공식대화를 하고 아 · 태 지역 지역협력체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APEC 정상들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채택, 2025년까지의 아 · 태 지역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APEC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 그 목표와 행동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보고서 권고사항(리마선언)」을 채택,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APEC 차원에서의 작업계획 등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APEC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포용적 무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우리 주도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소개하였다.

또한 저성장 탈피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발굴 ▲아 · 태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지적하고, 한국의 '스마트팜' 정책과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전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 주도로 채택된 「APEC 청년 교육 · 고용 · 창업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역내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활동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회원국 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2016년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서울(10월)과 파리(6월)에서 두 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우리의 OECD 가입 협정 서명일(1996.10.25)에 맞추어 외교부가 개최한 서울 세미나는 외교부 제1차관 등 우리 정부 인사와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등 OECD 고위급 인사, 그리고 주한 대사 등 외교단 및 국내 경제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년간 한국과 OECD 간 이루어진 협력을 재점검하

고 국내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 간 향후 협력을 어떻게 심화, 확대시킬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한편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가 2016년 6월 1~2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를 주제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참석자들은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4대 분야 구조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강조하는 한편 SDGs 이행을 위한 OECD의 역할 및 기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4차 OECD 글로벌전략그룹회의는 '세계화의 문제점 고치기(Fixing Globalization)'를 주제로 11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반세계화 정서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및 OECD의 기여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활동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 · 태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우리나라는 아 · 태 지역의 경제 · 사회 개발을 위한 유엔 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ESCAP 동북아사무소(2010년 설립, 인천 송도)와 유엔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APCICT: 2006년 설립, 인천 송도)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72차 유엔 ESCAP 총회가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과학 · 기술 · 혁신(Science · Technology · 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2016년 5월 15~19일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 · 기술 · 혁신 분야에서의 우리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과학 기술 교육 강화 ▲개도국 연구개발(R&D) 역량 및 창업 역량 강화 ▲민관 파트너십 강화 ▲개발재원 조성 등 아 · 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ESCAP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ESCAP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기여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제2차관은 샴샤드 아크타르(Shamshad Akhtar) 유엔 ESCA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유엔 ESCAP 진출 등 한 · ESCAP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5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럼')로 각국의 정 · 관 · 재계 지도자가 모여 세계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2016년도 다보스포럼은 1월 20~23일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우리 측 특사는 '전환기의 동아시아'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국제금융시장 불안

정성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톈진에서 6월 26~28일 개최된 2016년 하계 다보스포럼에는 우리 국무총리가 참석하였다. 국무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연설을 통해 창조경제 정책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소개하였다.

6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보아오포럼은 2001년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며 출범한 이래 매년 중국 보아오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6년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활력,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3월 22~25일 개최되었고, 이 포럼에는 중국 총리 등 11개국 정부 대표 및 재계 · 학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참석,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역내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개척자로서 창조경제를 육성하고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7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활동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전자상거래 등 WTO 협상 신의제 논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MIKTA 전자상거래 워크숍을 주최하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개발, 중소기업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현지화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7차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를 수검하고,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등 WTO 복수국 간 협상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11월 23일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장승화 교수(2012.6~2016.5)에 이어 김현종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2016.12~)을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8 분야별 경제협력 외교 기반 구축

1) 북극권과의 국제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에 정식옵서버로 가입한 이후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채택하고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북극이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제고를 위해 2016년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2차), 산하 6개 실무작업반 및 태스크포스 회의(15회)에 참여하였으며, 미국(북극이사회 의장국), 아이슬란드와 양자 북극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 백악관 주최 북

극 과학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북극 과학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제4차 북극 서클(Arctic Circle) 회의에서 '한국 분과세션'을 개최, 우리 북극정책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2015년 11월 개최된 한 · 일 · 중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주도로 2016년 4월 제1차 한 · 일 · 중 고위급 북극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한 · 일 · 중 3국 간 북극협력을 논의하고 2016년 7월 '신북극시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북극이사회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북극권 국가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북극해 공해상 어업회의에 참석해 북극해 해양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2) 과학기술, 투자보장, 사회보장 등 경제관련 협정 체결 및 개정

우리 정부는 2015년 GDP 기준으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에도 경제관련 협정을 활발히 체결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0월 대통령의 NASA 고다드센터 방문 시 우주기술 분야 최강국인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타진하였고, 그 결과 2016년 4월 한 · 미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2016. 11월 발효).

2016년 12월에는 과학 선진 4개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항공 · 우주, 환경 · 에너지 · 청정 기술, 생명과학, ICT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 양국 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예: 수용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지속 체결하여 왔다. 2016년에는 바레인,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아르메니아 등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에는 한 ·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및 한 · 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에 가서명하였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진출국과 과세권을 조정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는데 2016년에는 세르비아, 조지아, 에티오피아와 협정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신흥 경제국과의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인적 · 물적 교류 기반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하여 왔다. 2016년에는 세르비아, 에티오피아, 세이셸과 항공협정을 신규 체결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과 항공협정을 개정하였다.

3)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제네바, 벨기에 주재 공관을 비롯하여 40개 재외공관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저작권센터와 협력 관계를 구

축하여 권리 침해 발생 시 공동 대응해 왔다.

아울러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빈번한 중국 지역 지재권 담당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7.7~8, 광저우)하여 모조품 단속 등 재외공관과 우리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방한 초청(8.24~26)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특허 인프라 및 지재권 역량을 홍보하고 차기 WIPO 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식재산권 외교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 2 절

에너지 · 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 환경 외교

1 에너지 · 자원 협력

1) 에너지 · 물산업 분야 해외진출 지원

외교부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 촉진을 위해 2월 원전협력 대표단이 체코, 슬로바키아를 방문하고, 6월 체코, 슬로바키아 등 잠재적 원전 수출대상국이 포함된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국내 원전시설 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외교부는 '신기후체제에서 저유가가 기후변화대응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3

월),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 세미나(5월), '2016 글로벌 에너지안보 콘퍼런스(9월)'를 개최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후속조치로서 2016년 10월 제1차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행사를 계기로 요르단, 이란 등 10개국 주요 인사를 방한 초청하여 '물 산업 해외진출 국제 콘퍼런스'를 연계 개최하고, 국내외 물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였다. 또한 11월 민관합동시장개척단을 몽골에 파견하여 '한 · 몽골 물 산업 협력세미나'를 개최하고, 몽골 지하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양국 간 물관리협력사업 추진을 협의하였다.

2)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글로벌 논의 참여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총회(COP21)를 계기로 출범한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Mission Innovation)'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6월 Mission Innovation 장관회의를 계기로 향후 5년간(2016~2021) 청정에너지 공공 R&D 투자 2배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3) 역내 에너지안보 및 원자력안전 협력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외교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에너지 전략대화를 제도화하였다. 2016년 5월 제3차 한 · 미 국장급 에너지안보 대화 및 5월 제4차 한 · 일 과장급 에너지대화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한 · 미 · 일 3국 간 에너지안보 대화를 개최하였다.

한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제4차 동북아 에너지안보 포럼(12월)'을 개최하여 역내 전력망 연결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역내 원자력안전 협력 제고를 위해 2014년 제안한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양자협의를 지속하였으며, 2016년 6월 서울에서 한 · 일 · 중 3국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동북아 원자력안전 신뢰 제고 포럼(10월)' 개최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한 · 일 · 중 원자력안전 연구 전문가 워크숍(11월)'을 개최하였다.

4)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통한 민관 에너지 · 자원 협력

외교부는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50개)과 에너지보좌관(27명) 등 재외공관의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은 주재국과의 에너지 · 자원 행사 공동 개최, 네트워크 구축, 현지 에너지 · 자원 동향 수집 및 주요 입찰 정보 파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외교부 내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에너지 · 자

원 정보를 '일일/특집 국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에너지자원입찰정보'로 작성하여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 및 유관 기관 · 협회 등 약 2,900여 명에게 제공(2016년 일일동향 160회, 특집동향 52회, 입찰정보 40건 제공)하고, '2016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등 에너지 · 자원 관련 책자를 발간하였다.

2 녹색환경 외교

우리 정부는 전 지구적 녹색성장과 국제사회의 녹색 · 환경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016년 태국, 페루가 신규로 가입하여 회원국이 27개국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필리핀, 몽골, 에티오피아 등 20개 이상 개도국에서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에티오피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4개국을 대상으로 34개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GGGI 총회 · 이사회 참석 및 사무국, 회원국과의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GGGI의 제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GGGI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중장기 전략계획(2015~2020)을 이행하고 SDGs 채택 및 파리협정 체결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였다. GGGI는 2016년 9월에 글로벌녹색성장주간(Global Green Growth Week)을 개최했으며, 이 주간에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서밋(Global Green Growth Summit)[1]에서 기후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글로벌녹색성장주간(GGGW) 주요 성과

- 참석: 50여 개국 및 주요 국제기구 대표 등 2,000여 명
- 주요 행사: ▲녹색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행사인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포용적 녹색성장과 관련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글로벌 녹색성장 지식플랫폼 연례회의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아시아 지역 정책 대화 등
- 부대 행사: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녹색기후기금(GCF),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주관으로 개최

또한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동맹인 덴마크와의 양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10월 제6차 한 · 덴 녹색성장동맹회의가 총리급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계기로 북극연구협력 MOU를 포함한 10건의 기관 간 약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환경부 및 유관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흥 유망시장 및 민간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환경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였다. 2016년에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동유럽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5차례의 환경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우리 환경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수주 상담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11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6 글로벌 환경포럼을 개최하였다.

3 신기후체제 출범과 녹색기후기금(GCF) 정착

1) 파리협정 발효 및 신기후체제 출범

1)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은 녹색성장 어젠다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로 2011년 처음 개최된 이래 우리 정부와 GGGI 공동으로 4차례 개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의지를 결집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9월 3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시에 비준하고 이어 서구 유럽 국가들이 비준 대열에 동참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효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4월 22일 유엔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고위급 파리협정 서명식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비준을 위해 국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결과 11월 3일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다.

2016년 11월 7~19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하였다.

2) 녹색기후기금(GCF)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F는 2016년 12월 기준 총 35건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45억 7,000만 달러 규모)을 승인하여, 14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2016년 10월 제14차 이사회 시 우리 정부가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을 통해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EBRD 지속가능에너지금융사업'이 승인되어 GCF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4 환경 협력 강화

1) 동북아 지역 환경 협력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환경정책 및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대기 및 해양오염문제,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생물다양성,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동북아환경협력 회의 추진 현황

구분	회의명	날짜 및 장소	회의 내용
다자 간 협력	제20차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SOM)	2016.2.1~2, 일본	NEASPEC의 발전 방향 및 우선협력분야를 담은 「2016~2020 전략계획」 채택
	제21차 북서태평양 보전계획(NOWPAP) 정부 간 회의	2016.11.23~25, 서울	역내 해양환경보고를 위한 전략방안 모색 및 「2018~2023 중기전략」 검토
양자 간 협력	제1차 한 · 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2016.6.23, 부산	기후변화 정책 현황 공유, 신기후체제 출범에 관한 의견 교환
	제18차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2016.7.6~7, 홍천	10개 협력사업 진행 현황 점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한국 유치 지지 요청
	제21차 한 · 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2016.11.23, 서울	미세먼지 포함 국경 간 이동하는 대기오염 문제 의제화 및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제11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2016.12.6, 모스크바	13개의 협력사업 현황 점검 및 2건 신규사업 채택, 러시아의 '2017년 환경보호의 해' 관련 환경협력 논의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2016년 12월에는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2021년 개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서울 유치에 성공하여 아 · 태 지역에서 40년 만에 총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 및 협력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며, Our

Ocean Conference 및 지역 수산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노력에 동참하고, 유엔세계해양환경평가(UNRP) 정규절차 보고서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지원하였다.

3) 국내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외교부는 201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파리협정 및 환경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증진을 위한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국내 소재 녹색국제기구와, 정부부처,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로 개최된 「그린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소재 녹색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의 협력 강화 방안과 녹색 경제 · 환경 분야 국내 유관기관과 녹색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제 3 절

양자 경제외교

1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

2016년 한 · 중 양국은 국무총리 방중(6.26~30), 한 · 중 경제공동위(4.20, 서울) 등 고위급 양자협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발전전략 연계, 금융협력, 교역투자 활성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 확대 및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추어 중국 중서부, 동북부 지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한 · 칭하이성 우호주간(6.20~22, 시닝), 한 · 톈진시 우호교류행사(6.10.~11, 톈진), 한 · 후베이성 경제협력포럼(10.18~19, 우한) 등을 개최하였다.

한 · 일 양국은 2016년 한일 고위경제협의회(1.12)를 개최, 2015년 한 · 일 정

상회담 합의사항인 양국 기업 제3국 공동진출,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방송콘텐츠 및 한 · 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등 양국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 · 일 창조경제포럼(7.28), 일본 취업 설명회(12.2) 등 양국 간 경제교류 활동을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민간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한 · 일 경제인회의, 한 · 일 재계회의, 한 · 일 상공인 회의 등 한일 재계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EU와는 제13차 한 · EU 공동위가 2016년 6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2015년 9월 한 · EU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고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교육, 문화, 기후변화, 다자협의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발효 5주년을 맞은 한 · EU FTA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한 · EU 간 상품 ·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 한 · 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등 3대 핵심협정을 모두 서명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외교부는 6월 29일 경제외교조정관을 팀장으로 한 브렉시트 대응 TF를 설치하여 브렉시트 관련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제반 분야에서 우리의 대응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TF는 유럽 지역 주재 우리 공관이 기업활동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재외공관 · 기업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브렉시트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다.

2016년 9월 4일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 · 영 정상회담, 2016년 9월 20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한 · 영 외교장관회담, 2017년 2월 22일 제3차 한 · 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 · 영 간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2 수입규제조치 대응

최근 우리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42건)에도 전년(36건) 대비 증가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누적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총 184건(조사 중 46건 포함)으로 전년(175건) 대비 5% 정도 증가하였고, 이 중 반덤핑 조치가 135건, 상계관세 조치가 7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42건이었다.

이러한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사례로 ▲터키 정부의 휴대전화(스마트폰 등 한국산 시장점유율이 약 43% 차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종결 결정 ▲말레이시아 정부의 열연코일 세이프가드 조사 무혐의 판정 ▲인도네시아 정부의 냉연 스테인레스 스틸 반덤핑 관세 철회 ▲미국 정부의 철강후판 상계관세 무혐의(미소마진) 예비 판정 ▲미국 정부의 도금강판 상계관세 무혐의 및 저관세(1.19%) 판정 ▲중국 정부의 아크릴 섬유 반덤핑 관세 하향 판정(6.1%→4.1%) ▲EU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관세 하향 판정(44%→32.4%) 등이 있다.

또한 외교부는 본부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14개 주요국 주재공관에 '수입규제현지대응반'을 설치하여 적극 가동하기로 하였다.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 활동

- 수입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개시 이전, 조사 중, 예비판정, 확정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측 대응논리를 개발
-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 협의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2016년 수입규제대책반 파견(11개국, 16회): 인도(1.5, 10.7, 10.13), 태국(2.17), 터키(2.23), 인도네시아(2.18, 3.29), 일본(4.15), 미국(5.3, 6.16, 7.26), 중국(6.2), 대만(6.8), EU(9.13), 사우디(10.24), 베트남(11.14)
- 서한 및 정부입장서 전달
  -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 2016년 정부입장서/답변서 19건 제출, 서한 29건 발송

2016년 수입규제 대응 실적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 USD)	수입규제 유형	조치 결과	비고
1	휴대전화 (터키)	204,569 (2015)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조치 없이 조사 종결
2	열연코일 (말레이시아)	74,698 (2015)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조치 없이 조사 종결
3	냉연스테인리스스틸 (인도네시아)	20,693 (2015)	반덤핑	반덤핑 관세 미부과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 미부과 결정
4	철강후판 (미국)	201,714 (2015)	상계관세	예비 판정: 0.62% (미소마진)	상계관세 예비 판정 시 무혐의(미소마진) 판정
5	도금강판 (미국)	569,398 (2015)	상계관세	예비 판정: 0.69~1.37% 최종 판정: 0.72~1.19%	상계관세 최종 판정 시 무혐의 또는 저율 관세 판정
6	아크릴섬유 (중국)	19,025 (2015)	반덤핑	예비 판정: 6.1% 최종 판정: 4.1%	최종 판정 시 덤핑마진율 감소
7	철강제 관연결구류 (EU)	15,160 (2015)	반덤핑	기존 덤핑마진: 44% 최종 판정: 32.4%	최종 판정 시 덤핑마진율 감소

3 경제협력진흥외교

1)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재외공관의 기업 해외 수주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7개 수주 유망지역의 재외공관에 민관 협력체인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였다. 이러한 외교부의 노력과 우리 기업 및 재외공관 간 협력을 통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사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11.3%포인트 증가한 25.6%로 나타났다.

한편 외교부는 방산 수출 지원도 강화하였다. 고위급 회의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3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필리핀 호위함 건조 계약이 체결되는 등 2016년 25억 4,800만 달러의 방산 수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외교부는 외국의 노동 관련 법규 ·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K-move 멘토[2] 구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들 17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해외취업담당관들이 모여 해외 취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회의(2016.5, 서울)를 개최하였다.

2)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원활한 해외취업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당국 취업에 필요한 역량, 준비사항, 현지 정보등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애로사항 해소 지원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미래 유망시장인 아프리카 지역과 유럽 내 신흥공업국으로 주목받는 중유럽 지역 및 중동시장의 메카인 이란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다.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143개 공관, 266개 기업이 참여하여 70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대사, 총영사가 직접 기업인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2016년 기업 지원 활동 주요 사례

지역	내용	수주액
쿠웨이트	LNG 수입터미널 프로젝트 수주	29억 3,000만 달러
홍콩	국제공항 제3활주로 기반공사 수주	7억 2,000만 달러
필리핀	전력보조금 미수금 지급 지원	4,984만 달러
알제리	플랜트 건설사업(5개사, 8개 프로젝트) 미수금 회수 지원	3,500만 달러
몽골	A사 교통카드 소액결제 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소	–
상파울루	수출 가전제품 통관 애로 해소	–
인도네시아	한 · 아세안 FTA 특혜 관세혜택 회복	–

한편 외교부는 2016년 9월 1일 세계 7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에 따른 물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입 · 출항 및 하역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21개 국가에서 33개의 현지대응팀을 가동하여 현지 항만당국과 협의하여 하역 협조를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그 결과 11월 27일자로 97척의 컨테이너 선박에 선적된 화물이 모두 하역을 완료함으로써 물류 혼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여 연말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2016년에는 38개 공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강화 관련 설명회/포럼/세미나 개최, CSR 우수 활동 기업 시상, CSR 활동 홍보 사진전 및 사례집 발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 시 현지 노동법, 환경법, 세제, 통관, 부동산 취득 관련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데 외교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8개 재외공관에서 1,050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6년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주요 사례

지역	내용
나이지리아	우리 기업 주재국 발전소 건설 법인 설립 절차, 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등
중국	공금횡령, 채권회수, 기업보험 문제 해결 지원 등
몽골	원자재 납품대금 미수건 해결 등
상하이	경제보상금 회수법, 합작업체 대금분쟁 관련 자문 등
멕시코	한진해운 멕시코 법인 청산절차 자문, 노동법/이민법 설명회 개최 등
슬로바키아	법인설립 지원,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제도 소개, 세무이슈 자문 등
파나마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안내, 계약체결 대행자 지정 가능 여부 자문 등

3) 해외시장 정보 제공

외교부는 2016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입수한 각국의 경제동향, 박람회 및 입찰정보 등을 이메일을 통해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2016년 메일링 현황

(총59개 기관, 2016.12.31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입찰 정보	31	31	28	26	35	28	32	42	28	24	35	28	368
행사 정보 (박람회 등)	5	3	9	1	4	7	6	3	3	4	7	5	57
경제 동향	31	17	38	28	19	19	20	20	11	17	26	23	269
합계	67	51	75	55	58	54	58	65	42	45	68	56	694

또한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주재국 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67개 공관에서 1,002건의 기업 문의에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의 통상환경」,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등 책자도 발간하였다.